

제364회 국회  
(정기회)

##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2018년9월4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1

(10시03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 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일제의 강제 침탈에 맞선 의병활동

은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곤란을 이겨 내어 26년 만에 광복을 쟁취했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에 힘입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는 4·19 혁명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풍요로운 경제를 꽃피워 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었으나 어둠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 극복의 영광 뒤에는 소외와 배제, 차별과 특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7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에서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 2분기에는 0.97명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스스로럽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입니다.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내 노력과 필요에 비례해 공정하게 분배받고 대우받는 경제, 삶의 전 주기에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회, 자율과 참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평화와 협력 속에 함께 발전하는 한반도,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 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다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올의 눈물을 닦아 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100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 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넷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 다섯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선진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루어 냈던 성장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해내지 못해서 성장이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멈춰 서 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란의 중심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 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 산업의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만 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입니다.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 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인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 모델, 노동 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 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

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 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에 바세나르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습니다. 빙콕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20% 이상이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고용률을 75%까지 늘려 재정 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올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낯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과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 법

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갑질에 지친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반칙과 특권, 권력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입니다.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KTX 승무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들의 12년 투쟁을 부정해 버린 판결은 대법원의 재판거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있었던 것입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 적폐, 생활 적

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루어진 민·관 유착형 건설 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 성장이었습니 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 속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하여 보니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에서 74%가 수도권 일자리였습니다. 결국 지방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

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의사당 설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대부분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이러한 제안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님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정상회담들은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진행되어 중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실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123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세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남북과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의 긴장완화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을 금지했고 군 통신선도 복구되었습니다. 평화수역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정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 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지금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선투자를 해야 민간과 기업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바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창업-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서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인 162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도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구와 미래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을 위해 선정한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대 등 창업 금융을 활성화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세수 여건도 좋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23.5%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총지출도 GDP 대비 32%로 OECD 평균 40.6%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2%이고 작년 기준으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 부채도 GDP 대비 43.7% 수준으로 OECD 평균 113.3%에 비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 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100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압축 성장, 양적 성장, 중앙집중식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포용적 성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70년 분단 시대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닙니다.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의 목표는 누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우리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동안 국회는 당 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제도 가동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국민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가겠습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야의 협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2018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

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학자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고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이해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 의원(275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균현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웅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 ○개의 시 재석 의원(226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훈식
-----	-----	-----	-----

강길부	강병원	강석호	강효상
강훈미	강대은	강용칠	강상태
강권동	강경진	강경협	강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검	김삼화	김상훈
김희식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태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김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병두	맹홍철	문경미
박대철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원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현	박찬대	박홍근
백승석	서영교	백혜수	박변재
서삼훈	송금주	서혜원	성일종
송기훈	송석준	송언석	송갑석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송영길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동근
심기준	심상정	신재권	신창현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안규백
			안기우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규희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해찬
이현승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승래	조웅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주홍	황희

## ○출장 의원(2인)

이수혁 이현재

## ○청가 의원(11인)

강창일	김영주	민경욱	오제세
이상돈	이용주	이종걸	임이자
전혜숙	정양석	조배숙	

##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유인태
의사국장	권영진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	조명균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방부장관	송영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김은경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 【보고사항】

## ○의안 제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주승용·이용호·이동섭·이개호·이언주·신용현·김수민·이찬열·김삼화·강창일·이학재·손금주·김경진·윤영일·박주선·최도자·김동철·곽대훈·정인화·노웅래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이찬열·황주홍·김수민·조경태·이용호·권철승·이동섭·김철민·오제세·김종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이찬열·황주홍·김수민·조경태·이용호·권철승·이동섭·김철민·오제세·이언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이찬열·황주홍·김수민·조경태·이용호·권철승·이동섭·김철민·오제세·김종희 의원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이찬열·황주홍·김수민·조경태·이용호·권철승·이동섭·김철민·오제세·

김종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우원식 · 김상희 · 유은혜 · 심상정 · 유동수 · 윤소하 · 인재근 · 이정미 · 맹성규 · 윤후덕 · 제윤경 · 심기준 · 박홍근 · 이용득 · 박정 · 노웅래 · 설훈 · 소병훈 · 윤준호 · 서삼석 · 신창현 · 박찬대 · 송갑석 · 김철민 · 김영호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우원식 · 김상희 · 유은혜 · 심상정 · 유동수 · 윤소하 · 인재근 · 이정미 · 맹성규 · 윤후덕 · 제윤경 · 심기준 · 박홍근 · 이용득 · 박정 · 노웅래 · 설훈 · 소병훈 · 윤준호 · 서삼석 · 신창현 · 박찬대 · 송갑석 · 김철민 · 김영호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의원 발의)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6건 2018. 9. 3. 정부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김경진 · 이찬열 · 장정숙 · 황주홍 · 김광수 · 박주현 · 이개호 · 신용현 · 이동섭 · 김중훈 · 손금주 · 최경환(평) · 김수민 · 최도자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신경민 · 이규희 · 송갑석 · 소병훈 · 유은혜 · 권칠승 · 유동수 · 전재수 · 변재일 · 김성수 · 박홍근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박맹우 · 정갑윤 · 원유철 · 이채익 · 김성찬 · 김한표 · 권성동 · 박완수 · 강석진 ·

안상수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영진 · 강훈식 · 김병기 · 인재근 · 김민기 · 서영교 · 이인영 · 이종걸 · 소병훈 · 황희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영진 · 강훈식 · 김병기 · 인재근 · 김민기 · 서영교 · 이인영 · 이종걸 · 소병훈 · 황희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박병석 · 고용진 · 소병훈 · 김철민 · 조승래 · 전해철 · 이춘석 · 박찬대 · 김정우 · 남인순 · 김종민 · 김해영 · 손혜원 · 권칠승 · 우원식 · 안규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박성중 · 홍문표 · 박덕흠 · 이종구 · 김성찬 · 이은재 · 김석기 · 이해훈 · 정태욱 · 심재철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성수 · 이철희 · 박영선 · 신경민 · 이춘석 · 손금주 · 백혜련 · 오제세 · 조웅천 · 안규백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삼화 · 이학재 · 김경진 · 이동섭 · 이해훈 · 김종희 · 최도자 · 이찬열 · 송옥주 · 이언주 · 이용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변재일 · 강석진 · 윤일규 · 신경민 · 이석현 · 김병욱 · 이수혁 · 임종성 · 최운열 · 노웅래 의원 발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변재일 · 강석진 · 윤일규 · 신경민 · 이석현 · 김병욱 · 이수혁 · 임종성 · 최운열 · 노웅래 의원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중회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중회 · 김수민 · 윤영일 · 권칠승 ·  
유성엽 · 김경진 · 이용호 · 최도자 · 김광수 ·  
손금주 · 조배숙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김삼화 · 이학재 · 김경진 · 이동섭 ·  
이혜훈 · 최도자 · 이찬열 · 송옥주 · 이연주 ·  
이용호 의원 발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삼화 · 이학재 · 김경진 · 이동섭 ·  
이혜훈 · 최도자 · 이찬열 · 송옥주 · 이연주 ·  
이용호 의원 발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상희 · 전현희 · 정춘숙 · 윤일규 ·  
김경협 · 백혜련 · 윤관석 · 이재정 · 민홍철 ·  
전혜숙 · 안호영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윤후덕 · 이찬열 · 이원욱 · 이수혁 ·  
안호영 · 심기준 · 박정 · 조정식 · 강병원 ·  
최운열 · 송갑석 의원 발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노웅래 · 전현희 · 김영호 · 고용진 ·  
김철민 · 김경협 · 이동섭 · 박정 · 박찬대 ·  
안규백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안호영 · 강훈식 · 서영교 · 김현권 ·  
이석현 · 백재현 · 최인호 · 전현희 · 김병욱 ·  
윤후덕 · 윤일규 · 소병훈 · 박재호 · 이수혁 ·  
정춘숙 · 고용진 · 김정호 · 민홍철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노웅래 · 전현희 · 박찬대 · 장정숙 ·  
김정우 · 고용진 · 심기준 · 이원욱 · 김철민 ·  
송옥주 · 김영호 · 김경협 · 이동섭 · 박정 ·

안규백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노웅래 · 이원욱 · 심기준 · 고용진 ·  
김철민 · 송옥주 · 전현희 · 김영호 · 김경협 ·  
이동섭 · 박찬대 · 박정 · 안규백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노웅래 · 이원욱 · 심기준 · 고용진 ·  
김철민 · 송옥주 · 전현희 · 김영호 · 김경협 ·  
이동섭 · 박찬대 · 박정 · 안규백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변재일 · 강석진 · 윤일규 · 신경민 ·  
이석현 · 김병욱 · 이수혁 · 임종성 · 최운열 ·  
노웅래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김민기 · 김철민 · 윤후덕 · 손혜원 ·  
김병기 · 박찬대 · 김종민 · 노웅래 · 윤준호 ·  
김영호 · 이재정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민기 · 김병기 · 김종민 · 김철민 ·  
노웅래 · 손혜원 · 송옥주 · 이규희 · 이재정 ·  
윤준호 · 조승래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변재일 · 강석진 · 윤일규 · 신경민 ·  
이석현 · 김병욱 · 이수혁 · 임종성 · 최운열 ·  
노웅래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기동민 · 이철희 · 김철민 · 김상희 ·  
김병기 · 이재정 · 전혜숙 · 고용진 · 이춘석 ·  
전현희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김민기 · 김병기 · 김영호 · 김종민 ·  
김철민 · 노웅래 · 이규희 · 이재정 · 윤준호 ·  
송옥주 · 조승래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전재수 · 추미애 · 신경민 · 전혜숙 ·  
정재호 · 제윤경 · 최인호 · 신창현 · 박재호 ·  
윤준호 · 김병기 · 김중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8. 9. 3. 이원욱 · 안호영 · 원혜영 · 변재일 ·  
이학영 · 김현권 · 강훈식 · 윤영일 · 임종성 ·  
황희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  
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인사  
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  
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  
청문요청안**

(이상 5건 2018. 9. 3. 대통령 제출)

이상 5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견서 제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  
포함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결정문**

(2018. 9. 3.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계획서 제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2022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2건 2018. 9. 3. 정부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중증장애가족 활동지원 인정’에 관한 질문서**

**‘원격협진 활성화’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18. 9. 3. 김상희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18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이상 2건 2018. 9. 3. 정부 제출)